

# 한국인의 복지비용선호의 양가성: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드러난 상충된 답변에 대한 분석

박선경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 국문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복지선호와 세금선호에 상충적 태도갈등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특징과 원인은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부가조사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찬반의견을 여러 번 묻는데, 매우 유사한 두 질문에 대해 다르게 응답한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약 38%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답변의 상충성이 태도갈등의 하위개념인 양가성, 이중성, 불일치성 중 어떤 종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비용선호의 양가성 가설과 정부불신을 매개로 한 불일치성 가설을 제시하고 논증한다. 첫째, SIM모델(the similarity-intensity model)을 이용해 양가성을 측정할 때, 여성이고 저학력일수록 양가성을 가질 확률이 높고, 이념이 진보일수록 양가성을 가질 확률이 낮음을 확인했다. 둘째, 정부불신은 응답의 상충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불신을 매개로 한 불일치성이 상충적 답변의 이유는 아님을 확인했다.

주제어 | 복지선호, 양가성, 태도갈등, 한국복지패널조사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 선호의 태도갈등(attitude conflict)을 고찰하는 것이다.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부가조사는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묻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질문의 표현이 상당히 유사한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이한 응답자들이 있다. 한 문항은 사회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다른 문항은 복지예산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이 두 질문에 답한 총 응답자 4,185명 중 1,618명(38.6%)이 거의 동일한 위의 두 질문에 대해 각기 다른 답변을 했다. 매우 유사한 문항에 38% 이상의 응답자들이 다르게 답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오류라고 취급하기에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니며, 어떠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충적인 답변을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복지연구에서 여론의 복지 선호와 세금 선호가 중요한 것은 복지정책이 다수 국민들의 정책선호에 따라 반응해야 한다는 민주적 반응성의 원리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데 여론의 상당부분이 복지와 세금에 대한 상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정책의 반응성이 어떤 방향으로 조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복지와 증세에 대한 상충적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는 것은 복지연구에 필수적인 기초 작업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의 복지선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수 외 소득(강정희·염동문 2014), 이념성향(김윤태 외 2013; 최유석 2011; 황아란·이지호 2015), 정부의 질(서복경·황아란 2012; 이지호·황아란 2016; 이현우 2013), 복지혜택의 경험(김은지·안상훈 2010; 류만희·최영 2009; 안상훈 2009; 이중섭 2009; 주은선·백정미 2007)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해 복지선호의 형성요인들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구들은 복지확대와 증세에 대한 태도의 불일치성을 복지선호의 주요 특징으로 지적하기 시작했다(김사현 2015; 김영순·여유진 2011; 최균·류진석 2000). 이런 연구들의 공통적인 논지는 설문 응답자들이 복지지출의 확대는 원하지만 이를 위한 증세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응답자들의 태도갈등(attitude conflict)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복지태도의 불일치성을 주장한 위의 연구들과 유사한 이론적 맥락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복지확대와 비용회피 간 불일치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와 관련된 유사한 질문 간의 상충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기존연구들은 복지에 대한 넉프(Not out of My Pocket)현상을 분석했다면, 본 연구는 동일한 응답자가 한 설문지 내에서 보여준 응답이 논리적으로 일관적이지 않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답변이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 크게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후술하겠지만, 태도갈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일차원의 이슈축 기준으로 보면 일견 상충적으로 보일 수 있는 태도를 여론의 양가성이나 이중성, 불일치성의 하위개념으로 구분하여 분석해왔다. 또한 연구조사방법론에 대한 다수의 개론서들이 어휘나 표현의 미묘한 차이가 설문응답에 영향을 미치며 긴 설문지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뒤로 배치된 문항일수록 무응답률이 높다거나 답변의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Burnham et al 2008; Payne 1951; Tourangeau et al 2000).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복지선호에 관련된 응답들 간의 상충성은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복지비용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갈등을 가진 사람들의 규모와 내용,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기존연구검토와 이론적 배경

한국인의 복지선호를 다른 나라들의 복지선호와 비교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발견은 한국인의 보수적인 복지선호이다.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부의 복지지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확대에 대한 지지여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 이유로 크게 복지체험의 부족과 제도적 미발달로 인한 복지수혜자들의 비계급성(김영순·여유진 2011), 이념 혹은 정당선호의 때

개효과(김윤태 외 2013; 최유석 2011; 황아란·이지호 2015), 그리고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질에 대한 불신(서복경·황아란 2012; 이지호·황아란 2016; 이현우 2013) 등이 연구되었다.

또 다른 일련의 연구들은 복지의 확대에 의한 증세부담을 보수적 복지선호의 주요 설명변수로 지적했다. 복지확대를 증세와 연결시켰을 때 다수의 응답자가 복지확대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데, 복지의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그로 인한 세금부담은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이다(김사현 2015; 김영순·여유진 2011; 최균·류진석 2000).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현상을 복지태도의 ‘양가성(ambivalence)’, ‘이중성(duality)’, 혹은 ‘불일치(inconsistency)’의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위의 세 개념은 모두 태도갈등(attitude conflict)을 연구하는 하위개념으로서, 단일한 개념이나 대상에 대한 태도가 상충적인 경우를 설명하는데 자주 쓰이는 개념들이다<sup>1)</sup>. 세 가지 표현을 구분 없이 상충적인 태도갈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구들도 있지만, 김사현(2015, 30)의 지적대로 양가성, 이중성, 그리고 불일치성은 정확하게 보면 각기 상이한 개념이므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여론의 선호를 분석하는 전통적 관점(Thurstone 1928)은 유권자의 태도를 단일 차원으로 놓고 양 극단으로 갈수록 입장이 달라진다고 보는 일차원-양극화(unidimensional-polarization)모델이다. 그러나 일차원-양극화모델로는 설명하기 힘든 상충적인 태도들이 관찰되면서 일부 연구들이 이를 태도갈등으로 칭하고 그 속성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태도갈등의 종류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하위 속성은 선호의 양가성(ambivalence)이다. 양가성은 양극화된 일차원의 이슈축에서, 한 이슈나 대상에 대한 양극단의 평가가 공존하는 감정을 말한다(Alvarez and Brehem 1995; Cantril and Cantril 1999; Eagly and Chaiken 1993). 예를 들면, ‘좋다와 싫다’, ‘찬성한다

---

1) 본문에서 언급했지만, 본 연구는 태도갈등(attitude conflict)의 하위 개념으로 이중성, 불일치성, 양가성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하위 개념을 정의하거나 묘사할 때는 ‘상충적(contradictory)이다’ 혹은 ‘모순적이다’라는 표현은 구분없이 사용할 것인데, 이런 표현들은 태도갈등을 묘사하는 여러 연구들이 이중성, 불일치성, 양가성을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별도의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와 반대한다'처럼 서로 다른 양극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차원의 이슈축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시에 가질 수 없는 정반대의 선호가 공존하는 경우이다(Craig et al 20002, 287). 칼베론(Cervellon 2006, 10)은 예를 들어 초콜릿에 대한 사람들의 양가성이란 초콜릿의 단맛 때문에 초콜릿을 좋아하면서도 체중조절에 나쁘기 때문에 싫기도 하다는 모순적 감정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이중성(duality)은 일차원의 이슈축에서 한 개념이나 대상을 서로 다른 기준점(reference)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사현 2015, 30; Kerlinger 1976; Sidanius and Duffy 1988). 동일한 대상에 대한 내적 평가(implicit evaluations)와 외적 평가(explicit evaluations)가 다른 것이라고 정의되기도 하는데(Cervellon 2006, 10; Wilson et al 2000), 이런 정의 역시 동일한 대상을 상이한 기준(내면의 평가와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평가)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한 정의와 다르지 않다. 초콜릿 섭취를 다시 예로 들자면 동일한 체중의 나와 상대방을 두고, 내가 초콜릿을 먹는 것은 괜찮지만 남이 초콜릿을 먹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이중성이다.

불일치성(inconsistency)은 양가성이나 이중성과 달리, 이슈의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을 전제한다. 동일한 대상에 대한 평가를 일차원의 축으로 분석하면 일견 상충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평가가 다차원의 축을 통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평가의 내용을 개별 차원으로 분리시키면 그 내용이 상충적이지 않은 경우이다. 김사현(2015)의 지적대로 이러한 태도의 불일치성은 다차원의 이슈축을 분리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양가성이나 이중성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다시 초콜릿 섭취를 예로 든다면, 단기간에 에너지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초콜릿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축과 체중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초콜릿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축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다.

위와 같은 개념정의를 한국복지선호에 대한 기존연구들에 적용해보자. 복지확대를 지지하면서도 세금 증가를 반대하는 상충적 여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복지혜택의 한 축과 복지비용의 한 축을 분리했기 때문에, 양가성이나 이중성이 아니라 복지선호의 불일치성을 연구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최균·류진석(2000)은 복지의식을 복지책임의 주체 차원과 복지실천의지의 차원으로 분리해서 복지의식을 유형화한 후, 1999년 조사된 국민복지의식 조사자료를 통해서 복지의 책

임주체가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복지실천의지로서의 세금납부의사는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음을 발견했다. 저자들은 이를 복지의식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개념정의 상이는 이중성이 아니라 불일치성이다.

김영순·여유진(2011)은 2007년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를 통해 복지확대와 증세에 대한 여론의 불일치성을 확인했다. 저자들은 비일관적인 복지태도를 형성하는 주요 원인으로 계급문제를 지적했다. 서구 복지국가들과 달리 계급이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대신 낮은 계층일수록 높은 수준의 비일관성을 가짐을 보여주었다.

김사현(2015) 역시 복지확대와 증세 간 태도불일치를 연구했다. 태도불일치를 첫째, 복지확대를 위한 정부지출에 찬성하면서도 증세는 반대하는 복지비용회피적 불일치와 둘째, 복지확대에 반대하면서도 증세는 찬성하는 복지비용지지형 불일치로 구분하여 두 유형의 규모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저연령, 저소득, 저학력, 비상용직 계층,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이들에게서 복지비용회피적 불일치가 많이 관찰되었고, 남성, 고연령, 고학력, 상용직,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에게서 복지비용지지적 불일치가 많이 관찰되었다.

이런 기존 연구들의 첫 번째 기여는 우선 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갈등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한국 여론의 태도갈등을 다룬 연구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대부분 정당이나 이념의 태도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김장수 2005; 정한울 2013), 과연 한국인의 태도갈등이 정당이나 이념에 대한 갈등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에서도 발견되는 것인지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역시 한국인의 태도 갈등을 기존 연구들과 다른 소재로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기존연구들의 두 번째 기여는 복지에 대한 태도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복지확대는 선호하지만 비용은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의 불일치성은 정책적 측면에서도 유용한 발견이다. 그러나 비용부담을 둘러싼 불일치성 외에 복지에 대한 태도갈등의 양가성이나 이중성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발견 위에서 일차적으로 한국인 복지에 대한 태도 갈등이 불일치성 외에 양가성이나 이중성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만약 그러하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 III. 가설

복지태도갈등에 대한 가설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태도갈등이 있는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증세에 대한 의견을 여러 번 묻고 있는데 아래 두 문항은 특히 그 표현이 매우 유사하다.

문 9)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다니까? ①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①매우 동의한다, ②동의한다, ③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④반대한다, ⑤매우 반대한다.

문 15)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sup>2)</sup>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①매우 찬성한다, ②찬성한다, ③대체로 찬성한다, ④보통이다, ⑤대체로 반대한다, ⑥반대한다, ⑦매우 반대한다.

이후 편의상 9번 문항을 ‘사회복지확대문항’, 15번 문항을 ‘복지예산확대문항’이라고 명명하겠다. 이 두 질문은 문항의 앞부분에 ‘사회복지’와 ‘복지예산’이라

---

2) 이 문항에서 쓴 “걷어야 한다”는 국어맞춤법에 맞지 않는다. 징수행위를 설명하는 동사의 원형은 세금을 ‘거두다’이고 거두다의 축약형으로 ‘걷다’가 허용되지만, ‘어야 한다’는 활용어미가 붙을 때는 동사원형만 사용할 수 있고 축약형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걷어야 한다’가 아니라 ‘거둬야 한다’가 맞는 표기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국어원의 맞춤법 안내 사이트인 온라인가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 2017. 온라인가나다. [https://www.korean.go.kr/front/mcfaq/mcfaqView.do?mn\\_id=62&mcfaq\\_seq=3088&pageIndex=1](https://www.korean.go.kr/front/mcfaq/mcfaqView.do?mn_id=62&mcfaq_seq=3088&pageIndex=1) (검색일: 2017.2.17).

는 표현만 다를 뿐, 사실상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를 묻는 유사한 질문이다. 복지 선호가 단일차원의 이슈축에서 형성된다고 가정한다면, 위의 두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동일해야 한다. 과연 그럴까?

아래 표1은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두 문항의 답변이 전자는 5단계척도로 후자는 7단계척도로 나뉘져 있어서 두 문항 간 답변의 강도를 일대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 표1은 찬성, 중간(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음), 반대의 각 3단계로 단순화했다.

〈표 1〉 복지비용선호의 상충성 규모: 문항 응답

		복지예산확대문항			
		반대	중간	찬성	계
사회복지확대 문항	반대	632	233	253	1,118
		(60.95%)	(29.20%)	(10.77%)	(26.71%)
	중간	269	394	556	1,219
		(25.94%)	(49.37%)	(23.66%)	(29.13%)
	찬성	136	171	1,541	1,848
		(13.11%)	(21.43%)	(65.57%)	(44.16%)
계	1,037	798	2,350	4,185	
Pearson chi2(4)=1.4e+03			Pr=0.000		

‘사회복지선호문항’과 ‘복지예산선호문항’에 대한 답변이 같은 응답자는 전체 4,185명 중 2567명(61.33%)이고, 응답이 다른 사람은 1,618명으로 약 38.67%이다. 전체 응답자의 38% 이상이 유사한 문항에 대해 다르게 답변했다는 것은 분명 적지 않은 비중이다. 카이제곱검정 결과 또한 두 문항의 답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같은 값이 아님을 보여준다.

왜 이렇게 상당수 수의 응답자들이 매우 유사한 문항에 상충되는 답변을 했을까? 첫 번째 가설은 복지여론의 양가성이다. 양가성 태도갈등은 앞서 정의하였듯이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 좋고 싫음, 혹은 찬성과 반대 등처럼 양극단에 위치하



기 때문에 일견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입장을 한 사람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양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증세에 부정적일 수 있다. 복지와 증세에 대한 이런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설문조사에서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를 물어본다면,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을 동시에 가진 양가적 선호가 무작위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 즉, 특별한 이유없이 (혹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히 그것을 관찰할 수 없는 (unobservable) 범위에서) 어떤 경우는 증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다른 경우는 증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젤러와 필드먼(Zaller and Feldman 1992, 579)은 이런 현상을 변칙적인 오차분산(anomalous error variance)라고 명명했다. 이후 많은 여론조사 연구자들이 이러한 오류를 투표의 후보자선택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했고, 이런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양가성의 지속성과 중요성을 주장해왔다(Craig and Martinez 2005; Eagly and Chaiken 1993; Keele and Wolak 2006; Lavine 2001; Meffert et al 2004). 기존연구 간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sup>3)</sup>, 주로 이슈가 복잡할수록 양가성이 두드러지며, 학력이 낮고 소득이 낮은 하위계층이 양가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의 발견에 기반하여, 첫 번째 가설은 표1에서 발견한 ‘사회 복지확대문항’과 ‘복지예산확대문항’ 간 상충되는 답변은 복지비용선호에 대한 양가성이 표출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양가성은 주로 저학력과 저소득층에게서 더 많이 발견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상충되는 답변에 대한 두 번째 가설은 표1에서 발견된 상충적 답변을 태도갈등의 하위개념 중 하나인 불일치성으로 해석하는 가설이다. 불일치성 가설은 복

3) 모든 연구가 변칙적 오차분산의 원인을 양가성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물리건(Mulligan 2013)은 양가성을 측정하는 방식을 이분형 이분산성선택모델(Binary heteroskedastic choice model)과 순서형 이분산성선택모델(ordered heteroskedastic choice model)로 구분해서 분석한 뒤, 변칙적인 오차분산의 원인이 양가성이 아니라, 답변의 중도화(moderation)라고 주장한다.

지비용에 대한 선호가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 차원을 분리해서 보면 각각 단일한 차원에서 이해가능한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가설이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양가성 가설과 불일치성 가설을 구분하는 핵심은 복지비용에 관한 유사한 두 문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첫 번째 양가성 가설의 관점은 ‘사회복지확대문항’과 ‘복지예산확대문항’은 의미상 큰 차이가 없는 질문인데 단지 유권자가 각자의 이유로 모순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 불일치성 가설은 두 문항에서 사용된 표현의 차이를 유의미한 차이로 본다. 두 문항에서의 유일한 차이는 ‘사회복지’와 ‘복지예산’이라는 표현이다. 후자의 경우 ‘예산’을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복지비용을 위한 증세여부를 생각하면서 정부의 예산확보와 집행능력을 환기할 확률이 전자의 경우보다 더 높다. 즉, ‘사회복지확대문항’은 원칙적인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측면을, ‘복지예산확대문항’은 복지예산의 집행을 위한 비용측면을 각각 다르게 강조하는 문항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질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복지선호를 결정짓는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복지선호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정부의 질과 복지정책 수행능력에 대한 불신이 복지확대를 유보하게 하는 변수로 보았다(서복경·황아란 2012; 이지호·황아란 2016; 이현우 2013). 이런 이론적 논의에 기반해보면, 복지예산을 직접 언급한 ‘복지예산확대문항’이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확대문항’보다 정부의 질과 수행능력에 대한 불신을 더 상기시켜서 전자의 문항에 대해서는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답변을 더 많이 하고, 후자의 문항에 대해서는 복지확대에 덜 부정적인 답변을 했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불일치성 가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복지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묻는 문항인 ‘사회복지확대문항’에는 찬성 혹은 중도적 입장을 취하지만, 정부의 질과 수행능력을 강조한 문항인 ‘복지예산확대문항’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상충되는 답변에 대한 또 다른 가설로 문항배치효과(item order effects)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태도갈등의 양가성을 분석한 여러 연구들 역시 응답 간 차이가 본질적인 태도갈등이 아니라, 면접원효과, 설문문항의 모호함, 문

항배치효과 등의 측정오류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Alvarez and Brehm 1995; Craig et al 2002, 287-288).

본 연구가 사용하는 두 문항의 경우, 여러 측정오류 중 특히 문항배치효과가 상충된 답변을 이끌어내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문항의 배치를 살펴보자. 우선 ‘사회복지확대문항’(9번)의 경우, “다음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라는 안내문 이후 문항 7번에서 복지확대와 일할 의욕 간 관계를 묻고, 문항 8번에서 성장과 분배 간 입장을 묻은 후, 문항 9번에서 세부적인 하위 복지영역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 반면, ‘복지예산확대문항’(15번)의 경우, “II. 복지재원 및 대상범위. 다음은 세금부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하 생략)”이라는 안내문 이후 문항 13번에서 소득계층별 세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묻고, 14번에서 세금의 공정성(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에 대해 묻은 이후, 15번 문항에서 복지예산을 위한 증세입장을 묻는다. 즉, 사회복지확대문항은 국가의 복지제공에 관련된 입장을 묻는 문항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 복지예산확대문항은 세금의 공정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문항과 연결되어 있다. 두 문항의 배치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슈영역을 묻는 문항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문항배치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세 번째 가설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첫째, 자료의 부족이다. 문항배치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항이 배치된 설문지가 무작위적으로 배포된 서베이실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자료가 공개된 범위 내에서 한국의 복지선호를 묻는 서베이실험 연구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가설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둘째, 기존 연구를 통한 이론적 추정이 쉽지 않다. 설령 경험적 자료가 없더라도 기존 연구가 풍부하다면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지만, 현재 복지선호에 관한 문항배치효과는 전혀 연구된 적이 없다. 한국에서 문항배열순서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적는데, 주로 교육학에서 문항배열순서가 시험의 난이도와 변별도에 미치는 영향(김재철 외, 2009)이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홍은지, 성태제, 2015) 등이 연구되었고,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박철현 외 2012)에 문항배열이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등이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세 번째 가설인 문항배치효과에 대한 검증은 추후 과제로 유보하고 첫 번째 양가성

가설과 두 번째 정부불신에 의한 불일치성 가설을 확인할 것이다.

## IV. 경험적 분석

### 1. 변수의 측정

위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태도갈등을 측정할 지표가 필요하다. 첫 번째 가설이 주장하는 양가성은 SIM모델(the similarity-intensity model)로 측정할 것이다. SIM모델 혹은 그리핀공식(Griffin formula)으로도 알려진 이 방식은 톰슨 외 저자들(Thompson et al 1995)이 만든 것으로, 초기 카플란(Kaplan 1972)이 주장한 양가성 측정방식을 개선한 공식이며, 양가성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sup>4)</sup>. 양가성이란 일차원 축에서 서로 다른 방향에 있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양가성의 지표는 양극에 있는(polarized) 두 감정의 존재를 측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SIM모델의 측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양가성} = \frac{\text{긍정} + \text{부정}}{2} - |\text{긍정} - \text{부정}| \quad (1)$$

위 공식(1)의 앞부분은 양가성의 강도(intensity)를 측정하는 것인데, 긍정의 감정과 부정의 감정이 함께 있을수록 양가성은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0에서부터 10의 크기로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각각 수치화할 수 있다고 하자. 한 이슈에 대해 부정의 감정이 8이면서 긍정의 감정도 8인 경우와 부정의 감정이 2이면서 긍정의 감정인 2인 경우를 비교하면, 둘 다 양가성이 존재하는 것은 맞

---

4) SIM모델 공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톰슨과 공저자의 책(Thompson et al 1995)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공식의 의미와 한계는 크레이그 외(Craig et al 2002)와 물리건(Mulligan 2013)가 논하고 있다.

지만 전자가 후자보다 더 높은 강도로 양가성을 가지고 있다. 공식(1)의 앞부분을 통해 이런 양가성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공식(1)의 뒷부분은 양가성의 유사성(similarity)을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금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9이고 긍정적인 감정이 1인 홍길동과 세금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6이고 긍정적인 감정이 4인 전우치를 비교해보자.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가성의 강도는 5로 동일하지만, 홍길동은 전우치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더 치우쳐져 있으므로 두 사람의 양가성이 같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상충하는 두 감정 간의 유사성이 다르다. 부정적인 의견에 더 치우친 홍길동보다는 상충하는 두 감정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전우치가 더 양가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식(1)의 뒷부분은 긍정과 부정 간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양가성의 유사성을 측정한다.

종합하면 SIM모형을 통해 계산된 양가성은 상반되는 감정의 강도가 클수록, 그리고 상반되는 감정이 유사할수록 양가성이 커지도록 구성되어있다. 상반되는 감정의 크기가 유사할수록 공식(1)의 뒷부분에서 차분되는 값이 적기 때문에 양가성은 커지는 것이다. 홍길동과 전우치의 예를 보면, 유사성은 5로 동일하지만, 홍길동의 경우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8이고, 전우치는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2라서 유사성의 정도가 전우치가 적기 때문에 최종적인 양가성값은 홍길동이 -3, 전우치가 3으로 전우치가 더 양가성이 높은 사람이다.

SIM모형에 따른 종속변수의 측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확대문항’에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설문지에서 9번 문항)에 매우 동의한다고 답한 의견은 3, 동의한다는 2,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1, 나머지 부정적인 의견은 0으로 코딩하여 ‘사회복지확대문항’에 대한 긍정적 의견변수(변수명 <9번긍정>)를 만들었다. 또 매우 반대한다를 3, 반대한다를 2,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1, 나머지 긍정적인 의견은 0로 코딩하여 ‘사회복지확대문항’에 대한 부정적 의견변수(변수명 <9번부정>)를 만들었다. ‘복지예산확대문항’(설문지에서 15번 문항)도 동일한 방식으로 코딩하여 <15번긍정>변수와 <15번부정>변수를 만들었다. 최종적으로 양가성변수는 아래 공식(2)와 같이 계산된다<sup>5)</sup>.

5) 두 문항의 답변이 전자는 5단계 척도이고 후자는 7단계 척도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감안

$$\text{양가성} = \frac{9\text{번 긍정} + 15\text{번 부정}}{2} - |9\text{번 긍정} - 15\text{번 부정}|,$$

혹은

$$\frac{9\text{번 부정} + 15\text{번 긍정}}{2} - |9\text{번 부정} - 15\text{번 긍정}|$$

(2)

공식(2)에서 분리된 두 문장은 표현만 다를 뿐, 긍정적 답변과 부정적 답변을 교차해서 측정한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동일하다.

두 번째 가설인 정부불신에 의한 불일치성 가설은 “예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연상효과를 주장하는 가설이다. 원론적으로는 복지확대를 선호하지만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응답자라면, ‘사회복지확대문항’에는 긍정적으로 응답하되 ‘복지예산확대문항’에는 부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지표는 양가성을 측정하는 SIM모델과 다른 방식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측정의 핵심은 불일치성의 원인이 되는 서로 다른 이슈축을 구분할 수 있게 응답의 유형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표 2〉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한 불일치성 측정방법

		복지예산확대문항		
		반대	중간	찬성
사회복지 확대문항	반대	일치	정부지지형 복지반대	정부지지형 복지반대
	중간	정부불신형 복지지지	일치	정부지지형 복지반대
	찬성	정부불신형 복지지지	정부불신형 복지지지	일치

이를 위해 표2처럼 두 문항을 교차하여 각 영역별로 상충적인 응답이 나타나

---

하지 않고 SIM모델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SIM모델 자체가 답변의 크기 차이를 반영하는 모델이므로 척도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두 문항의 척도를 3단계 척도로 일치시킨 후, SIM 모델의 동일한 공식으로 양가성을 측정하여 분석했는데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는 유형을 구분하였다. 첫째, 대각선으로 교차되는 칸에 있는 응답들은 두 문항에 대한 답변이 일치하는 경우이다. 둘째, 왼쪽 아래의 3칸은 사회복지확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복지예산확대에 반대하는 경우로 이른바 정부불신형 복지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가설은 바로 이러한 정부불신형 복지지지자들이 상충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라고 본다. 앞선 표1에서 확인하였듯이 전체 응답자 총 4,185명 중 576명(13.76%)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표2의 구분에 따르면 오른쪽 위의 3칸에 있는 세 번째 유형이 나온다. 이들은 사회복지확대에 반대하면서도 예산확대는 반대하지 않는 응답자이다. 이

〈표 3〉 변수의 정의와 코딩방식

변수이름	정의	코딩방식
여성	성별 더미변수	여성=1, 남성=0
연령	연령 7단계 척도	20대=1, 30대=2, 40대=3, 50대=4, 60대=5, 70대=6, 80대이상=7.
교육수준	학력 수준 5단계 척도, 중퇴 포함	중졸이하=1, 고졸 이하=2, 전문대졸=3, 대졸=4, 석사 이상=5.
실업상태	현재 주된 경제활동 상태	비실업자(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 포함)=1, 실업자=0.
가계소득	연간총급여액	설문에 있는 모든 소득문항(총 6개)의 가계수입 합계(만원단위)의 로그값.
복지혜택 경험	모든 영역의 복지서비스 수혜 경험 합계의 평균	설문에 있는 총 77개의 복지서비스 경험 여부 문항 중 수혜를 받은 경우를 각각 1로 코딩한 값의 평균.
진보	정치성향 중 진보성향 더미	매우 진보와 진보=1, 나머지 다른 응답=0
보수	정치성향 중 보수성향 더미	매우 보수와 보수=1, 나머지 다른 응답=0
정부정책 평가	정부의 사회정책 (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보육서비스, 빈곤, 실업, 성평등, 주택, 교육 분야)에 대한 평가	총 9개 분야의 개별 평가값들의 평균. 개별문항은 매우 잘하고 있다=5, 잘하고 있는 편=4, 보통=3, 잘 못하는 편=2, 매우 잘못하고 있다=1의 순으로 코딩됨.

러한 응답을 보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추론해보는다면, 아마도 이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확보 자체는 지지하지만 원론적으로 복지확대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일 것이다. 전체 응답자 4,185명 중 총 1,042명 (24.9%)이 이 유형에 해당하며 앞으로 이들을 정부지지형 복지반대자라고 명명하겠다. 표2의 측정방법과 표현은 한국복지의 불일치성을 분류한 김사현(2015)의 방식을 따랐다.

가설검증을 위해 사용된 통제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연령, 성별, 학력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들과 가계소득, 실업상태, 복지혜택 경험여부 등과 같은 복지관련 자기이해(self-interest)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들, 이념성향,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 등 정치변수들이다. 각 변수들의 정의와 코딩방식은 표3에 정리되어 있고, 표4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이다.

〈표 4〉 기술통계

변수명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여성	17984	.5431495	.4981485	0	1
연령	14705	3.987691	1.842049	1	7
교육수준	16978	1.966839	1.154454	1	5
실업상태	15349	.5387322	.4985138	0	1
가계소득	17791	4.470083	3.002499	1.098612	10.26423
복지혜택경험	17984	.0729647	.226141	0	3.285714
진보	3944	.2096856	.4071358	0	1
보수	3944	.364858	.4814514	0	1
정부정책평가	17984	.678214	1.261164	0	5
SIM	4185	-.4878136	1.030588	-2	3
불일치성	4185	.3866189	.4870333	0	1
정부불신형 복지지지	4185	.1376344	.344557	0	1
정부지지적 복지반대	4185	.2489845	.4324765	0	1



## 2. 분석 결과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유사한 두 문항에 각기 다르게 답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아래 표5는 SIM모형을 이용한 양가성 가설을 검증한 결

〈표 5〉 SIM모형을 이용한 양가성 가설 검증

	모델 1	모델 2	모델 3
여성	0.181*** (0.034)	0.179*** (0.035)	0.178*** (0.035)
연령	-0.015 (0.012)	-0.010 (0.013)	-0.010 (0.013)
학력	-0.042** (0.017)	-0.035* (0.018)	-0.035* (0.018)
실업상태	0.048 (0.058)	0.002 (0.059)	0.001 (0.059)
소득 <sup>6)</sup>	-0.005 (0.010)	0.003 (0.011)	0.003 (0.011)
복지혜택경험	-0.037 (0.070)	-0.076 (0.069)	-0.076 (0.069)
진보		-0.116** (0.045)	-0.116** (0.045)
보수		-0.032 (0.037)	-0.032 (0.037)
정부정책평가			-0.002 (0.033)
상수	-0.445*** (0.101)	-0.461*** (0.104)	-0.454*** (0.147)
R <sup>2</sup>	0.0106	0.0124	0.0124
사례수	4,151	3,913	3,913

주: \* p<0.1; \*\* p<0.05; \*\*\* p<0.01.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표 6〉 정치불신에 의한 불일치성 가설 검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불일치	정부불신형 복지지지	정부지지적 복지반대
여성	0.100 (0.072)	0.007 (0.102)	0.123 (0.080)
연령	-0.050* (0.027)	-0.064 (0.041)	-0.025 (0.030)
학력	-0.067* (0.036)	-0.027 (0.053)	-0.069* (0.041)
실업상태	-0.107 (0.120)	-0.110 (0.170)	-0.063 (0.132)
소득	0.004 (0.022)	0.032 (0.030)	-0.015 (0.024)
복지혜택경험	-0.033 (0.171)	-0.067 (0.268)	-0.003 (0.191)
진보	-0.039 (0.091)	0.034 (0.129)	-0.068 (0.103)
보수	0.010 (0.075)	0.181* (0.107)	-0.099 (0.084)
정부정책평가	-0.012 (0.065)	0.049 (0.097)	-0.047 (0.071)
상수	-0.086 (0.297)	-1.867*** (0.441)	-0.614* (0.327)
R <sup>2</sup>	0.002	0.0034	0.0039
사례수	3,913	3,913	3,913

주: \* p<0.1; \*\* p<0.05; \*\*\* p<0.01.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과표이다. 모델(1)은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을 분석한 것이며, 모델(2)는 정치성향을, 모델(3)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모델이다.

분석 결과 세 모델에서 모두 90%이상 수준에서 유의미성을 보인 변수는 성별, 교육수준이다. 여성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양가적 응답을 보일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양가성을 가진 응답자들이 주로 저소득이나 저학력의 하위계급이라는 서구 사례에 기반한 기존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학력과 양가성의 발현 간 관계의 매커니즘은 다양할 수 있다. 우선, 저학력층일수록 복잡한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양가적 태도를 많이 가진 것일 수 있다. 혹은 학력 자체와 무관하게 고학력층도 태도의 양가성을 가질 수 있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이 앞서 유사한 질문에 이미 응답했다는 것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선 답변과 상충되는 답변을 덜 하게 될 것이므로 양가성이 덜 표출될 수 있다. 추가적인 문항이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학력과 양가성 간의 구체적인 매커니즘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학력이 낮을수록 양가적인 입장을 더 많이 드러낸다는 점은 모델(1), (2), (3) 모두에서 안정적으로 발견된다.

또한 이념성향 변수가 고려된 모델 (2)와 (3)에서는 스스로의 정치성향을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양가적 응답을 보일 확률이 낮았다. 진보성향을 가진 응답자일수록 복지지지적 입장이 강할 것이므로 복지비용에 대한 두 문항에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렇다면 정부 불신에 의한 불일치성도 경험적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 표6은 두 번째 가설인 정부불신에 의한 불일치성 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모델 (2)는 표2의 분류 중 정부불신형 복지지지자를 1로 코딩한 더미변수가 종속변수인 모델이고, 모델(3)은 정부지지적 복지반대자를 1로 코딩한 더미변수가 종속변수인 모델이다. 모델(1)은 유형 간 구분없이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이 일치하지 않는 응답자들을 모두 1로 코딩하고, 응답이 일치하는 응답자를 0으로 코딩한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모델이다. 두 번째 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모델(2)의 결과이다. 모델(2)에서 9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일하게 결과를 보여주는 변수는 보수성향뿐이다. 스스로 자신의 정치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사람들일수록 정부불신형 복지지지유형일 확률이 높았다. 모델(3)에서 보듯이

6) 가계소득의 경우, 표5에서 사용한 측정방식인 총 연간소득액의 로그값이 아니라 한국복지패널이 설정한 일반가구(중위 균등화 소득 60%이상)과 저소득층 가구로 측정하여 분석하였을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부지지적 복지반대유형은 교육수준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6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불신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설2가 확인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정부불신형 복지지지유형이 많거나 반대로 정부의 정책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정부지지적 복지반대유형이 많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6의 어떤 모델에도 정부능력평가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다. 즉, 정부의 정책능력에 대한 불신이 복지비용에 대한 상충적인 응답을 만들어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sup>7)</sup>.

## V 결론

지금까지 2013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부가설문을 이용하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를 묻는 유사한 두 문항을 두고 얼마나 많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상이한 답변을 했는지 확인하고,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유사한 문항에 대한 일관된 답변을 한 사람들은 고학력, 남성, 진보성향의 사람들이고, 반대로 저학력, 여성, 진보성향이 아닌 사람일수록 상충된 답변을 했다. 정부 정책평가변수를 통해 본 정부불신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복지비용에 대한 상충되는 응답들은 정부의 정책능력불신에 의한 불일치성의 발현이 아니라, 양가성 태도의 발현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본 연구가 제시한 경험적 근거에 한계가 있는데, 무엇보다 양가성 가설의 가장 큰 경쟁가설인 문항배치효과가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저학력 응답자들이 문항배치효과에 더 취약할 수 있는데, 경험적 분석 결과 학력수준과

7) 표6에서 정부불신을 측정하기 위해 총 9가지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문항을 이용했는데, 엄밀히 보면 이 변수는 추상적 개념인 정부불신과 약간 차이가 있다. 복지선호와 정부의 질을 연구한 기존연구들이 주로 정부의 전반적인 능력, 청렴성이나 공정성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정부불신을 개념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방식의 차이 때문에 기존 연구들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상충적 응답 간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문항배치효과가설을 무시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선 한국의 복지비용선호에 관한 응답의 상충성이 결코 적지 않음을 밝혔다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또한 상충되는 응답을 한 사람들의 특징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특징이 복지선호의 불일치성을 아니라 양가성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한국인의 복지선호와 관련된 태도갈등을 분석한 연구가 매우 적고, 그 중에서도 선호의 불일치성과 양가성을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여론의 태도갈등연구에 기여한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정희 · 염동문. 2014. “소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정치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0권 2호, 319-351.
- 김사현. 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1권 1호, 27-57.
- 김영순 · 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권, 211-240.
- 김은지 · 안상훈. 2010. “한국 복지정치의 젠더메커니즘: 태도의 성별차이와 복지지위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권, 309-334.
- 김윤태 · 유승호 · 이훈희. 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 『한국학연구』 45권, 183-212.
- 김장수. 2005. “정당일체감에 따른 인식의 양극화: 기제와 완충요인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12권, 145-168.
- 김재철 · 김성훈 · 김선희. 2009. “문항배열순서가 변별도와 난이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22권 2호, 409-427.
- 류만희 · 최영. 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과학학회보』 13권, 191-210.
- 박철현 · 장안식 · 정혜원. 2012. “범죄의 심각성 평가에서 문항위치효과.” 『한국범죄학』 6권 2호, 3-35.
- 서복경 · 황아란. 2012.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 중심의 정책평가: 고령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5권, 5-34.
- 안상훈. 2009.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16집 1호, 163-192.
- 이중섭. 200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권, 73-99.
- 이지호 · 황아란. 2016.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분석-복지수준과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권 1호, 257-285.
- 이현우. 2013. “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분석: 정부의 질, 한국과 북유럽국가 비교.” 『한국정치연구』 22권 3호, 95-119.
- 정한울. 2013. “정당 태도갈등이 투표행위 변동에 미치는 영향: 18대 총선 및 19대 총선

- 패널조사(KEPS)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2권 1호, 243-277.
- 주은선 · 백정미. 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호, 203-225.
- 최균 · 류진석. 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16호, 223-254.
- 최유석. 2011.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분산: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지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권, 57-83.
- 홍은지 · 성태제. 2015. “문항배열순서와 성별이 피험자 능력추정의 정확성과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28권 2호, 361-379.
- 황아란 · 이지호. 2015. “복지부문 정부역할 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31권 2호, 177-210.
- Alvarez, R. Michael, and John Brehem. 1995. “American Ambivalence Towards Abortion Policy: Development of a Heteroskedastic Probit Model of Competing Valu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 No 4, 1055-1082.
- Burnham, Peter, Karin G. Lutz, Wyn Grant, and Zig Layton-Henry. 2008. *Research Methods in Politics*, 2nd Edition. London, UK: Palgrave Macmillan.
- Cantril, Albert H., and Susan Davis Cantril. 1999. *Reading Mixed Signals: Ambivalence in American Public Opinion About Government*.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 Cervellon, Marie-Cecile. 2006. *Ambivalent and Dual Attitudes: Attitude Conflicts and Their Impact on Decision Making and Behavior*. Ph. D. Diss., McGill University.
- Craig, Stephen C., James G. Kane, and Michael D. Martinze. 2002. “Sometimes You Feel Like a Nut, Sometimes You Don’t: Citizens’ Ambivalence About Abortion.” *Political Psychology* 23, No 2, 285-301.
- Craig, Stephen C., and Michael D. Martinze. 2005. *Ambivalence and the Structure of Political Opinion*. New York: Palgrave McMilan.
- Eagly, Alice H., and Shelly Chaiken.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 Keele, Luke and Jennifer Wolak. 2006. “Value Conflict and Volatility in Party Identifica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 NO 4, 671-690.
- Kerlinger. Fred N. 1976. “Social Attitudes and Their Criterial Referents: A Structure Theory.” *Psychological Review*. 74, No 2, 110-122.

- Lavine, Howard. 2001.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Ambivalence Toward Presidential Candid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 915-929.
- Meffert, Michael F., Micheal Guge, and Milton Lodge. 2004. "Good, Bad and Ambivalent: The Consequences of Multidimensional Political Attitudes." Willem E. Saris and Paul M. Sinerman, eds. *Studies in Public Opinion: Attitudes, Nonattitudes, Measurement Error, and Chan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63-92.
- Mulligan, Kenneth. 2013. "Variability or Moderation? The Effects of Ambivalence on Political Opinions." *Political Behavior*. 35, 539-565.
- Payne, Stanley L. 1951. *The Art of Asking Ques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idanius, Jim and Gavan Duffy. 1988. "The Duality of Attitude Structure: A Test of Kerlinger's Criterial Referents Theory within Samples of Swedish and American Youth." *Political Psychology*. 9, No 4, 69-670.
- Thurstone, Louis L. 1928. "Attitudes Can Be Measur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3, 529-554.
- Thomson, Megan M., Mark P. Zanna and Dale W. Griffin. 1995. "Let's Not Be Indifferent About (Attitudinal) Ambivalence." Richard E. Petty and Jon A. Krosnick eds. *Attitude Streng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361-386.
- Tourangea, Roger, Lance J. Rips, and Kenneth Rasinski. 2000. *The Psychology of Survey Respon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son, Timothy D., Samuel Lindsey, and Tonya Y. Schooler. 2000. "A Model of Dual Attitudes." *Psychological Review*. 107, No 1, 101-126.
- Zaller, John and Stanley Feldman. 1992. "A Simple Theory of the Survey Response: Answering Questions versus Revealing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 No 3, 579-616.



## Attitude Conflict of Public Preferences on Tax Increase for Welfare Expansion in South Korea

**Park, Sunkyong** | Peace and Democracy Institute, Korea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attitude conflict of public preferences on tax increase for welfare expansion in South Korea. The 8th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2013 has two almost identically framed questions to ask citizens' preferences on tax increase for welfare expansion. More than 38% of survey respondents display conflicting answers on these two similar questions. To figure out the cause of these conflicting responses, this paper presents and compares two hypotheses: ambivalence hypothesis and trust in government hypothesis. The empirical results display that women and less educated people tend to have ambivalent attitudes and the progressive tend to have consistency. Also trust in government is not correlated with conflicting answers.

---

**Key Words** | Preferences on Welfare, Ambivalence, Attitude Conflict, Korean Welfare Panel Study.